



## 9·15 정전사태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우리나라 전력산업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대규모 정전사태가 지난 9월 15일 13시경 발생했다. 당시 30℃를 웃도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냉방부하가 급증했고, 추석연휴를 보낸 근로자들이 공장 등 산업현장으로 속속 복귀하면서 전력수요가 폭주했다.

당일 오전 10시경 전력수요가 떨어져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났고 결국 예비전력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뒤늦게 찾아온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후 시간대의 냉방부하가 폭증, 예비전력이 제로에 가까워졌고 전력거래소는 순환정전이란 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당시 전력거래소 임직원이나 전력업계 관계자들은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 나타났던 전력수요패턴과 달라 당혹스러웠다”고 회고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당연히 9·15 정전사태와 관련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속 드러났다. 소통부재가 문제였다. 정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발전 6사 등은 서로 남의 일인 양 무관심했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발전회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급박한 상황에 메모를 남겨둔 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을 정부 관계자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지경부 전력산업과로 가야할 팩스는 엉뚱하게도 무역위원회로 보내지고 심지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한전도 나 몰라라 했다. 정부는 손 놓고 있었고 한전은 시키는 일만 한 셈이다. 당시 전력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소통부재 등을 문제 삼으며 전력거래소가 갖고 있던 전력계통 운영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지지자들은 한전의 전력판매경쟁도입을 전제조건으로

“ 9·15 정전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양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반대론자는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대재앙으로 봤고 찬성론자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

달았다.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월 4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해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경위 소속 의원 중 김진표 의원(민주당)을 제외한 총 25명 중 24명이 이 법률개정(안)에 서명했다. 유례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번 정전사태와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 지지자들이 전력거래소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판매경쟁도입이란 조건을 달며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난달 13일 전력산업연구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번 정전사태는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특히 전력거래소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한전의 판매부분의 분리를 전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력계통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한전의 전력판매부분 경쟁도입을 전제조건으로 달려고 했다. 의원들의 저지로 묵살됐으나 여전히 전력판매부분 경쟁도입을 전제로 전력계통의 통합을 검토 중인 셈이다.

9·15 정전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양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반대론자는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대재앙으로 봤고 찬성론자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발전회사는 분사의 의미를 잃게 돼 통합이란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점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전력산업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9·15 정전사태와 관련 올바른 전력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KEA